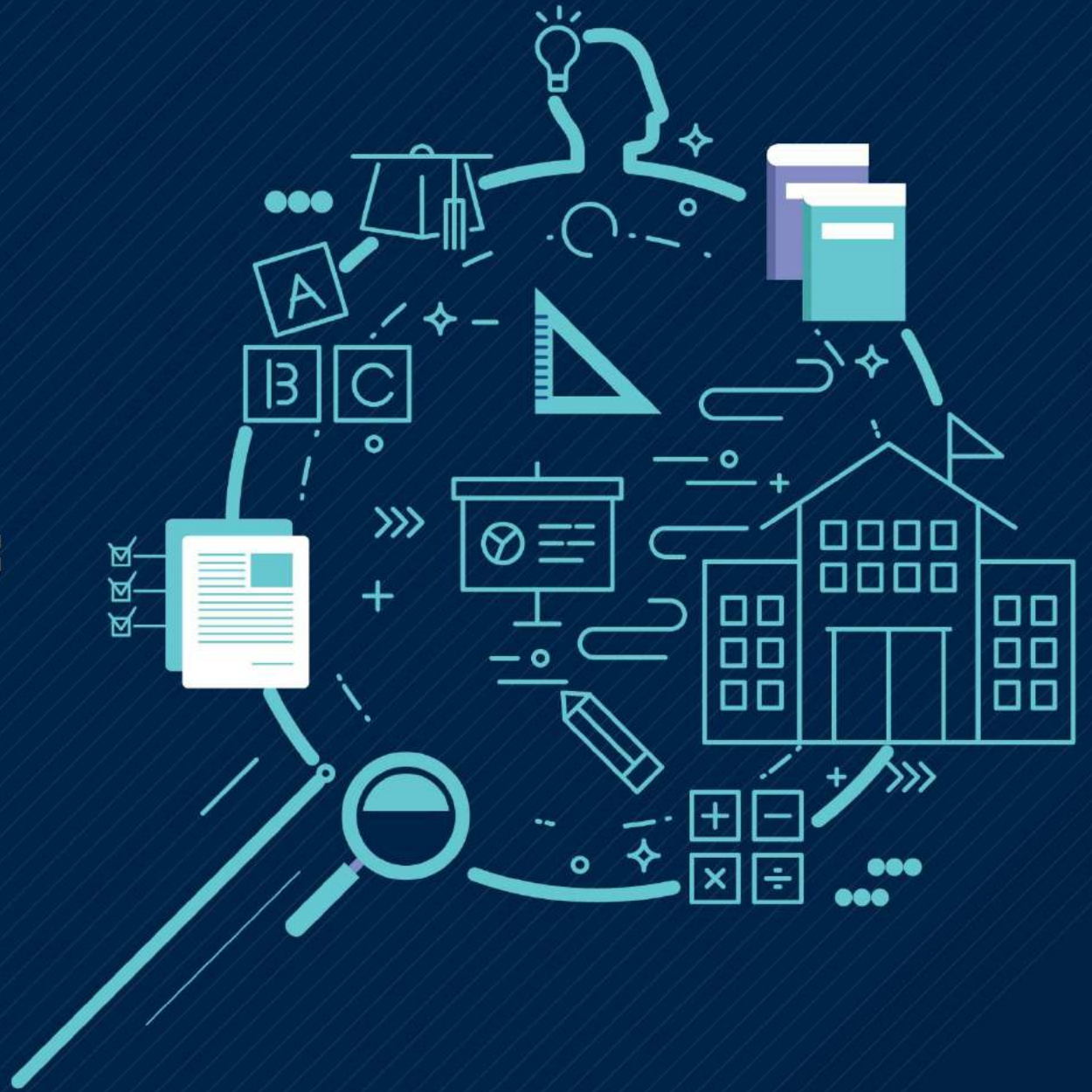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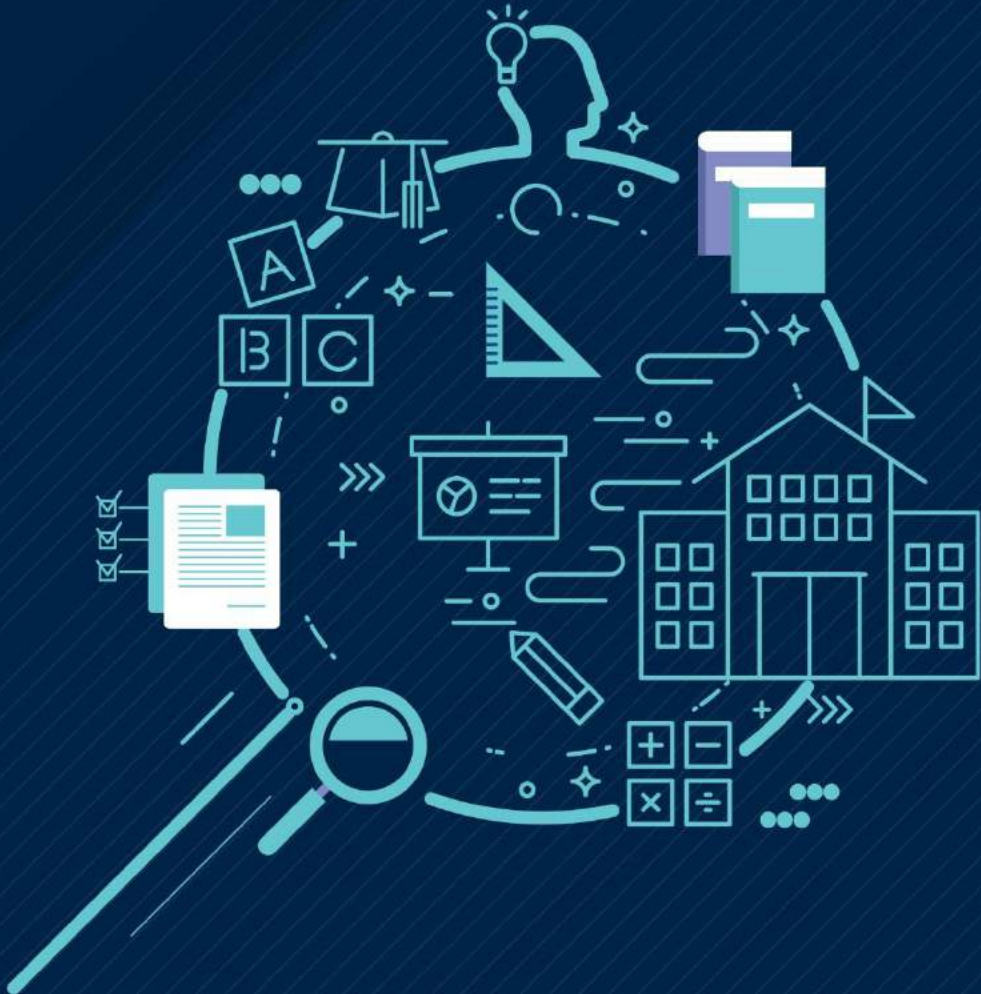


문재인정부 전반기
교육분야 국정과제
주요성과와 향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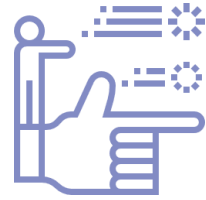


교육분야 국정과제 주요성과와 향후 방향



／ PA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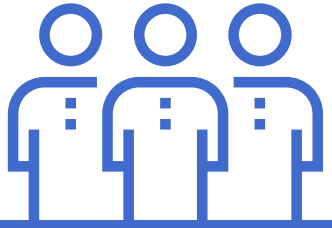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과 교육분야 국정과제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



- ▶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
- ▶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

정의로운 대한민국



- ▶ 특권과 반칙을 일소
- ▶ 원칙과 상식의 존중
- ▶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 보장
- ▶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2

더불어
잘사는
경제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 활력이 넘치는 공정
경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
하는 4차 산업혁명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 국제 협력을 주도
하는 당당한 외교

20대 국정전략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2

더불어
잘사는
경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전략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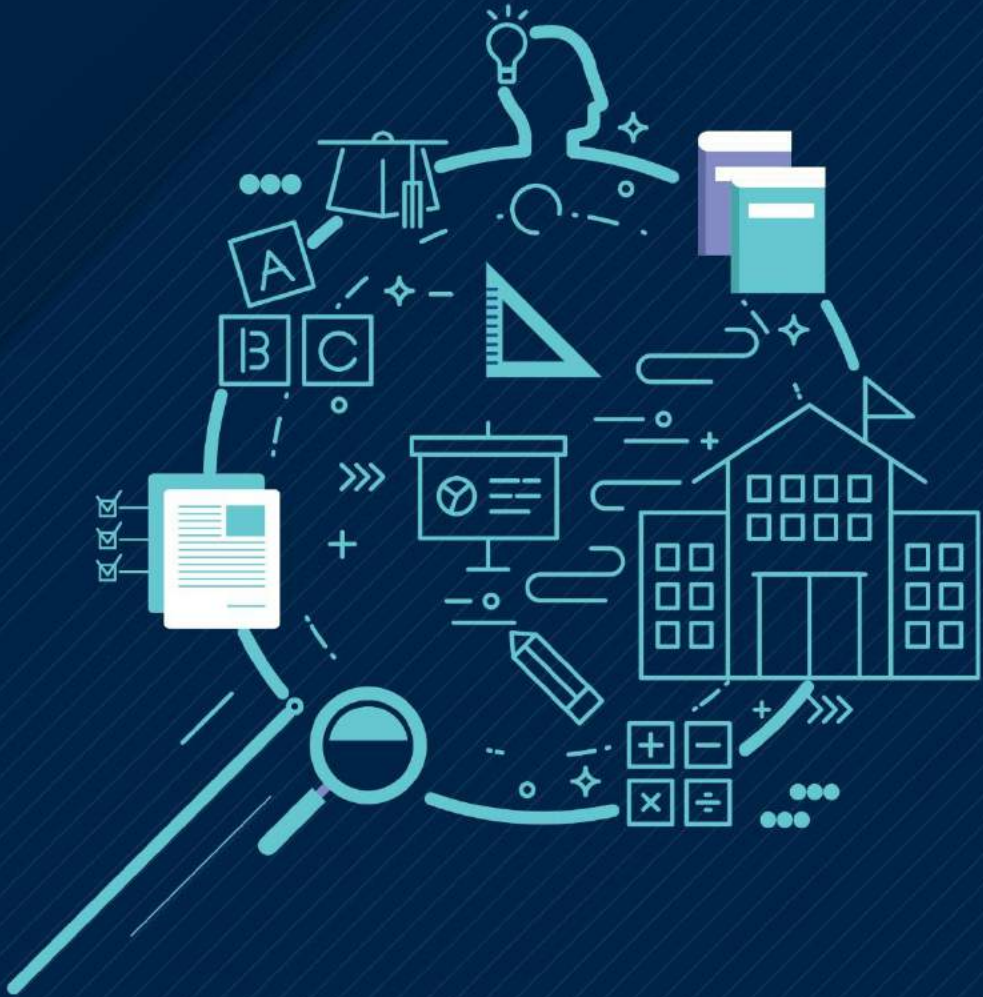
국정과제

-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 미래 교육 환경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 ☑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분야 국정과제 주요성과와 향후 방향



／
PART 2

교육분야 국정과제 주요성과

누리과정 전액 국고 편성 등 유아 공교육 강화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18~)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유아당)

보육료



22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

➔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도입으로 입학절차간소화

처음학교로 참여율

17개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완료(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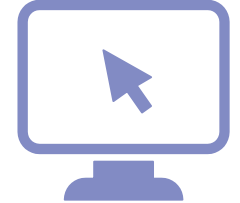
공·사립
100%
참여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현원 200명 이상 전체 사립유치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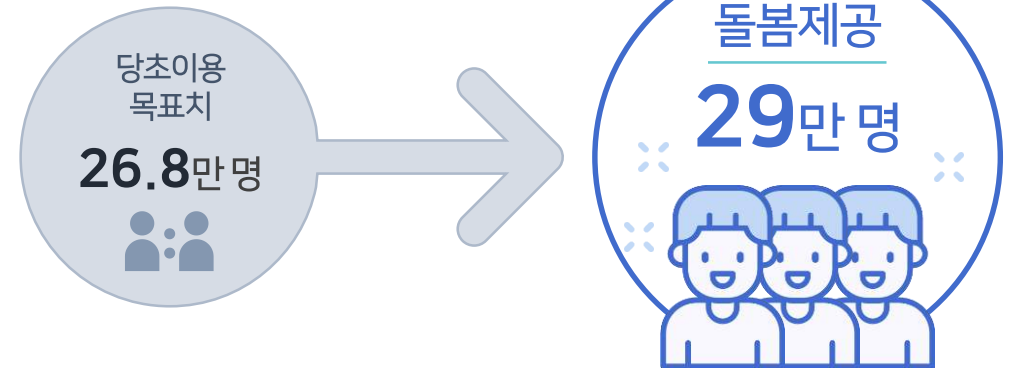
'에듀파인' 100%(568개원) 도입 달성

※ 도입 희망 사립유치원 753개원 추가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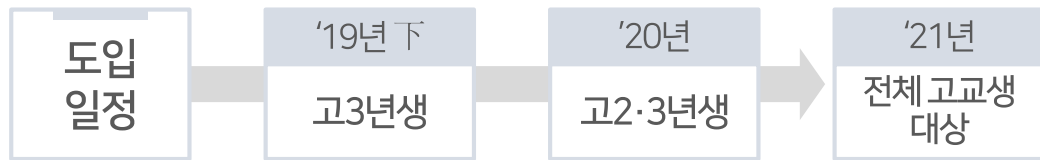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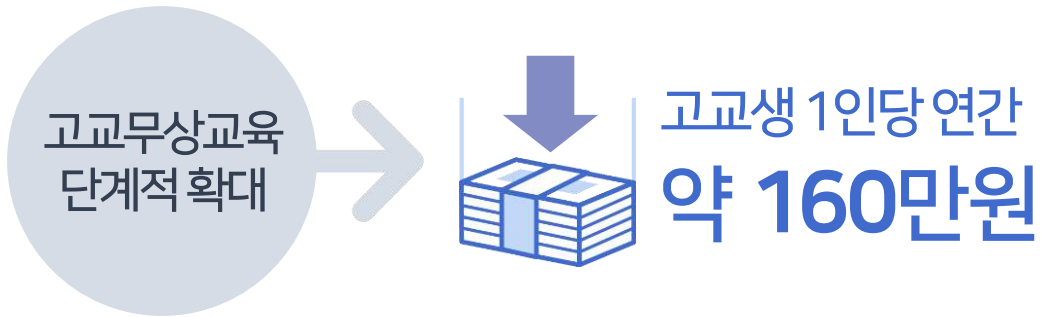


초등 돌봄체계 강화

초등돌봄교실 1,512실 확충(18~19)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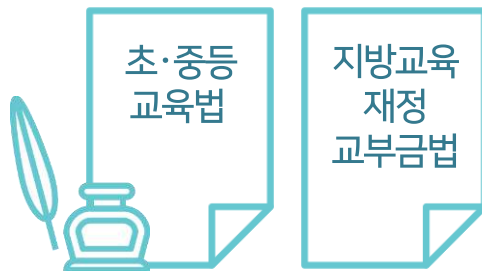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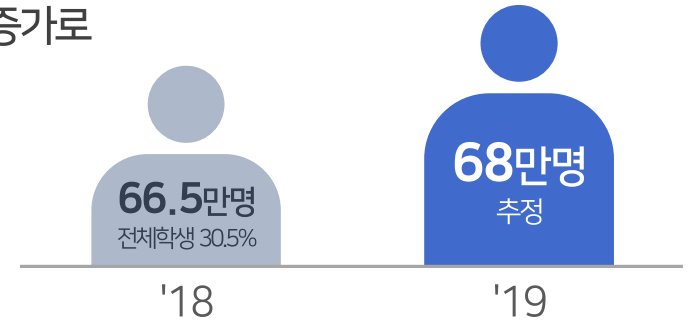
※ 지원사항: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

- 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 및 소요재원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19.10월)



대학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 반값등록금 수혜자 증가로 고등교육 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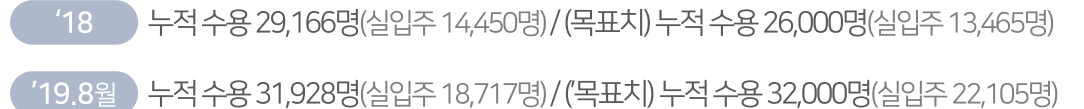
- '18년 국공립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19년 사립대학 281교 모두 입학금 감축 이행 완료

※ 입학금 폐지 근거 마련 ('고등교육법' 개정, '19.10월)



- 질 좋고 저렴한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 확충 등으로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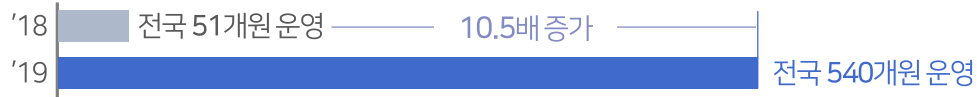
* 사립, 연합기숙사, 기숙사형 청년주택, 학생종합복지센터, 국립대 BTL 기숙사 등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유아·초등학교 학습 및 휴식 등 권리 보장

- ※ 유아중심·놀이중심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 ('19.7.24.)
- ※ 놀이와 쉬 중심의 방과후 놀이유치원 운영



고교 체제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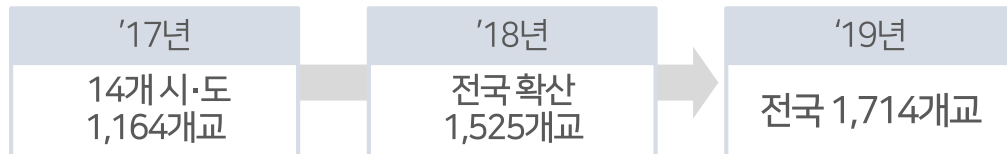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통해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

- ※ 연구·선도학교 : ('18년) 105교 ➡ ('19년) 354교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마련('19.11월)

혁신학교 확대·발전

'민주적 학교운영', '소통·협력', '교육과정 다양화' 등 학생이 중심이 되는 공교육 혁신 주도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제고 추진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논술 및 특기자 전형 지속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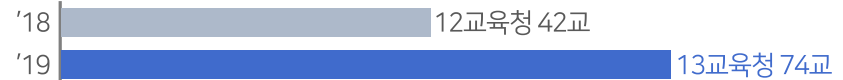
- ※ ('18년) 19,473명, 5.5%, ('19년) 18,799명 5.4%, ('20년) 16,809명 4.8%, ('21년) 15,097명 4.3%

대입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전예고제(4년전 공표),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규정 신설('19.4월)

기초학력 보장체제 구축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강화

교실내 수업 중 학습지원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선도·시범학교 확대



학교내 두드림학교의 다중지원팀 구성으로 맞춤형 지원 강화



학교밖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원체제 구축·운영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학입학 지원 강화

- ➔ 성인학습자 친화 학사제도(학습경험인정제 실시, 원격수업 기준 마련 등)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17.11.9)
- ➔ '고른기회 특별전형' 운영 의무화
 - ※ 고른기회 특별전형 선발 현황(매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기준)
'19학년도: 12.4%(43,371명) → '20학년도: 13.3%(46,327명) → '21학년도: 13.7%(47,606명)
- ➔ 지방우수인재의 지역정주 유도 및 지방대학 입학 기회 확대
 - ※ 의학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인원(명): ('17) 1,393 → ('18) 1,409 → ('19) 1,532

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

- ➔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중점학교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18년)	
중점학교 운영기간	결과 다문화수용성 점수(평균)
2017~2018년(2년간)	74.58점 ('17) → 74.64점 ('18)
- ➔ 다양한 학교 밖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의 학습권을 보장
 -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등록학습자: ('18.6) 137명 → ('19.7) 467명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및 특수교육의 질 향상
 - 과밀학급 3.7%p 감소 ('17년) 15.8% → ('18) 14% → ('19) 12.1%
 - 특수교사증원 현황 ('17) 507명 → ('18) 1,173명 → ('19) 1,036명 → ('20) 1,398명(확정)
 -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 ('17) 5.95명 → ('18) 5.56명 → ('19) 5.35명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17년) 67.2% → ('18) 71.9% → ('19) 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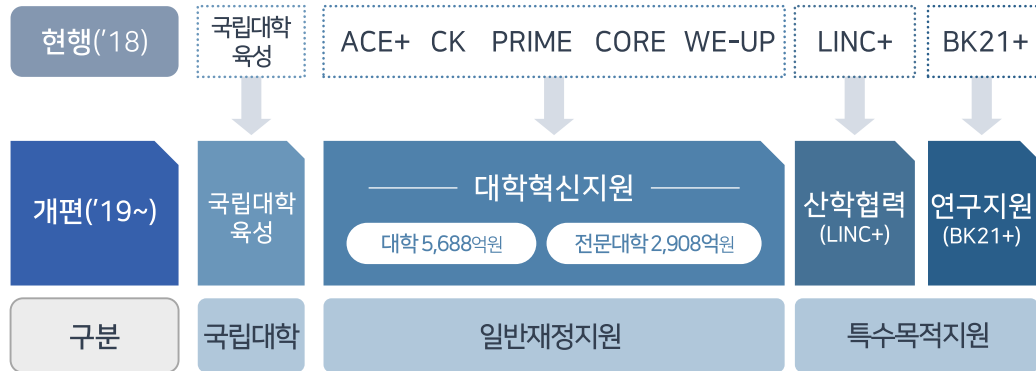
고졸 희망 시대 구현을 위한 선취업 후학습 지원 확대

-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
 - 고졸 재직자의 역량 개발을 위해 대학 진학 시 학비 전액 지원
 - '18 290억원
 - '19 580억원
- ➔ 국립대 고졸 재직자 전담과정 운영 확대
 - 거점 국립대 '18 → 국립대 전체 '22
- ➔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19.1),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발표('19.2)

대학의 자율성 및 공공성 강화

-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모든 국립대학(39개교) 재정지원 확대
※ ('17년) 18개교 210억원 → ('19년) 29개교 1,504억원
-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 사업 통합하여 단순화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18)



- 대학혁신 지원방안 수립('19.8)하여 전반적인 대학혁신을 위해 필요한 과제 설정 및 추진

고등교육 재정 확충

- 92,807억원('17년) → 94,987억원('18년) → 100,806억원('19년) → 108,057억원('20년 정부안)
- '17년대비 '20년 16% 증가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통한 직업교육 질 제고

-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51개교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
- 변화하는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학과개편
※ ('18년) 98개 학과 → ('19년) 125개 학과

전문대학의 질 획기적 제고

-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자율적 혁신 지원
※ ('18년) 2,508억원 → ('19년) 2,908억원
- 지역 직업교육거점센터로서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 지정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역량개발 지원

- K-MOOC 대폭 확대('17) 324개 → ('19) 650개
※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19.6~)
- 매치업(한국형 나노디그리) 운영('18) 10개 → ('19) 20개(누적)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지원('19, 30개교)

산학협력을 통한 혁신성장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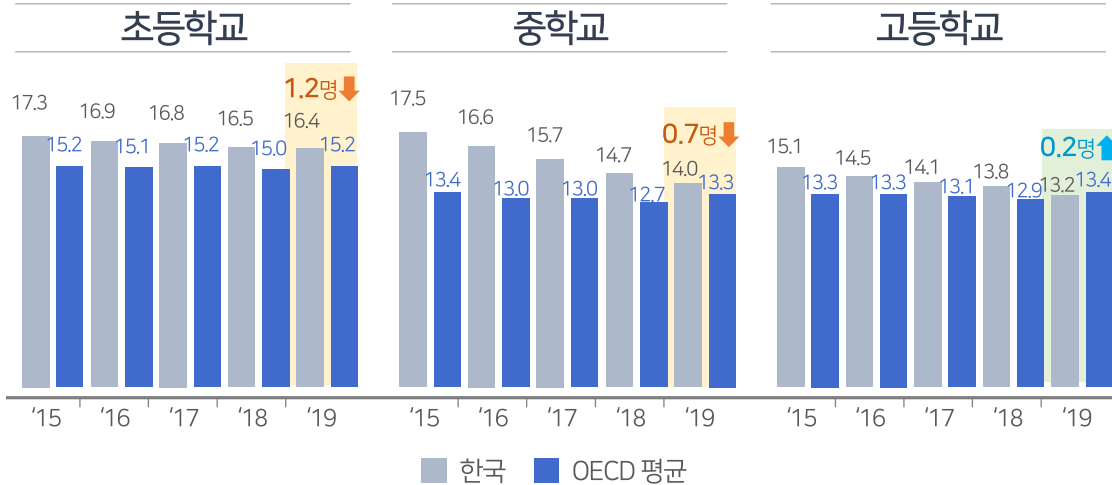
- LINC+ 사업을 통해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 운영
- '대학창업유망팀 300' 육성, 대학창업펀드 등 체계적인 창업 지원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

교원 확충을 통한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지속개선

* OECD 국가 평균 대비 격차 지속적 감소(고등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상회)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교 공간혁신 추진

유연한 학습환경 및 학습·휴식·놀이가 균형을 이루는 생활공간 조성

* 교실단위 427개, 학교단위 87개교 사업추진 중('19.11)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한 석면제거 및 내진보강

※ 석면건축물 포함학교 : ('17.6) 1만 3,066교 → ('19.6) 9,936교 → ('27년) 무석면학교 실현

※ 내진보강 : 지진위험지역(경남·경북·울산 등) ~'24, 그 외 지역 ~'29까지 완료

학교미세먼지저감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 ('17년) 약 660개교 시범설치 → ('19년) 모든 교실(약 27만실) 설치

아동학대 의심 학생 조기 발견 및 보호 체계 구축

예비소집 단계부터 경찰청,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안전 확인('17~)

입학일 이후 NEIS 시스템을 통해 미인정결석 학생 현황을 조사('19.3~) 하고, 소재안전 미확인 시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지속 수사

생존수영교육 등 안전사고에 대한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초등학생 2~6학년으로 교육대상 확대하여 연간 10시간 이상 생존수영 교육



사학비리 근절을 통한 교육신뢰 회복

- ▶ 한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주요 사립대 16개교에 대해 '21년까지 종합감사 실시(19.6~)
- ▶ 사학기관 회계감리대상 법인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학기관 감리주기 단축('17년, 15년 → '22년, 5년)
* ('17년) 20개 → ('18년) 25개 → ('19년) 30개 → ('20년) 40개 → ('21년) 50개 → ('22년) 60개
- ▶ 시민감사관 도입(19.7, 15명), 유관부처와 협업을 통한 합동감사단 구성을 통해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교육거버넌스 개편

- ▶ 사회부총리와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구성(17.8)하고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마련(17.12)
※ 지방교육재정 분석·평가제도 일원화 등 1차 우선정비과제 발굴 및 이행('18~) 2차 우선정비과제 발굴 및 이행 추진 중('19~)
-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승래의원 등 45인, 3.25.) 및 국회 논의 지속

현장과의 소통협력 강화

- ▶ 찾아가는 정책서비스(토크콘서트)를 통해 새롭게 추진되는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 이해도 제고

	참가자	평균만족도
진로교육 (1회)	208명	90점
고교학점제 (5회)	1,185명	87점
혁신학교 (3회)	577명	88점

- ▶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 On누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정책부서의 온·오프라인 교육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 온라인**
 - 나우미래 동영상 시청자 소감(6.17~30)
 - 게임중독(사용장애)에 대한 설문조사(6.17~24)
 - 학운위 제도개선 관련 설문조사(8.30~9.11)

- 오프라인**
 - 2019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토크콘서트) -고교학점제 및 학교혁신 등 총 7회(41명 참석)

교육분야 국정과제 주요성과와 향후 방향



PART 3

국민이 바라보는 교육정책

문재인 정부 전반기('17.5.10~'19.10.27) 교육정책 동향 빅데이터 분석

※ 네이버 뉴스(676개 언론사), 네이버 커뮤니티 및 카페, 트위터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교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 사립유치원 비리 해결, 에듀파인 적용



수능

대입 준비, 수능 절대평가 도입 및 영향, 사교육 부담 우려, 대학 입시



고교 무상교육

문재인 정부 복지, 무상교육 실현과 지속가능성, 유치원 무상교육, 어린이집 무상보육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영향, 강남 8학군 부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시간강사 처우 개선, 조리원 파업 및 급식 대란, 국립대병원 파견직 정규직 전환 요구, 임금 인상



입시 특혜 의혹

촛불 집회, 정치인자녀 관련 의혹, 논문 저자 논란

* 201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 조사 결과(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전국의 성인남녀 4,000여명, '19.8.12~9.6 조사)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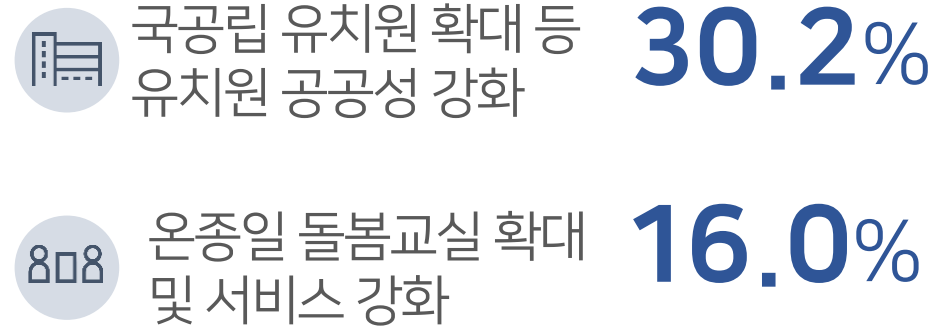
입시·학사·채용의
공정성 확보 정책 **49.5%**



중대비리 사안에 대한
신속한 감사·조사 실시 **24.0%**

* 201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 조사 결과(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전국의 성인남녀 4,000여명, '19.8.12~9.6 조사)

유·초·중등 교육 정책 중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



여론조사*를 통해 본 교육정책 이슈

* 201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 조사 결과(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전국의 성인남녀 4,000여명, '19.8.12~9.6 조사)

초·중등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
27.0%



수업방식의
다양화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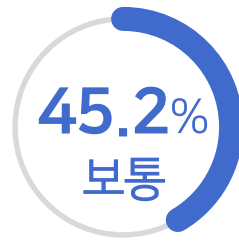
* 201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 조사 결과(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전국의 성인남녀 4,000여명, '19.8.12~9.6 조사)

현 정부 고등학교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고교 학점제
도입



고교 체제
개편



* 201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 조사 결과(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전국의 성인남녀 4,000여명, '19.8.12~9.6 조사)

현 정부 대학교육에 대한 의견

대학교육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전반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55.4%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

등록금 부담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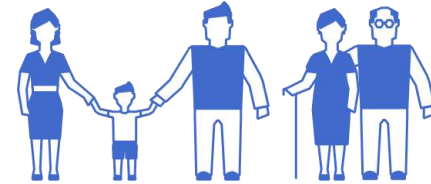
33.0%

* 201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 조사 결과(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전국의 성인남녀 4,000여명, '19.8.12~9.6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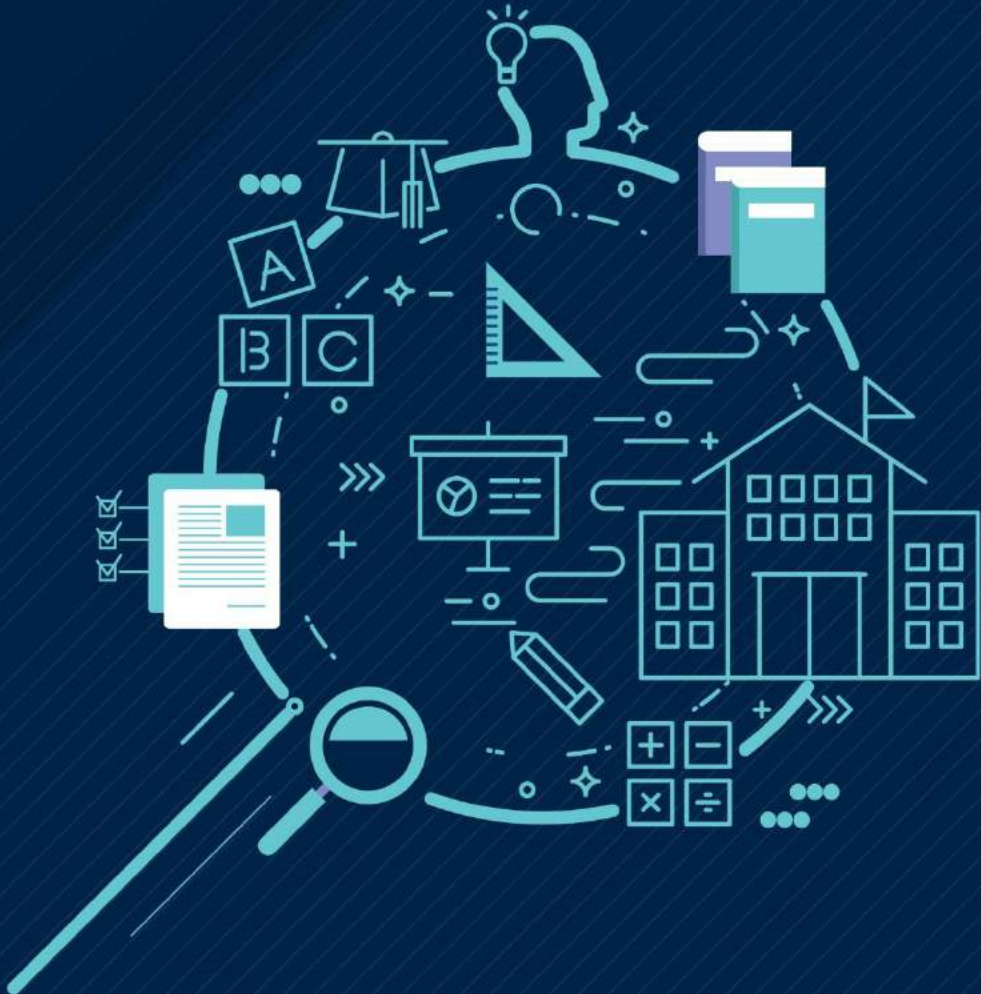
현 정부 평생·직업
교육 정책 중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

생애단계별 맞춤형 진로 교육 강화

23.3%



교육분야 국정과제 주요성과와 향후 방향



교육분야 국정과제 향후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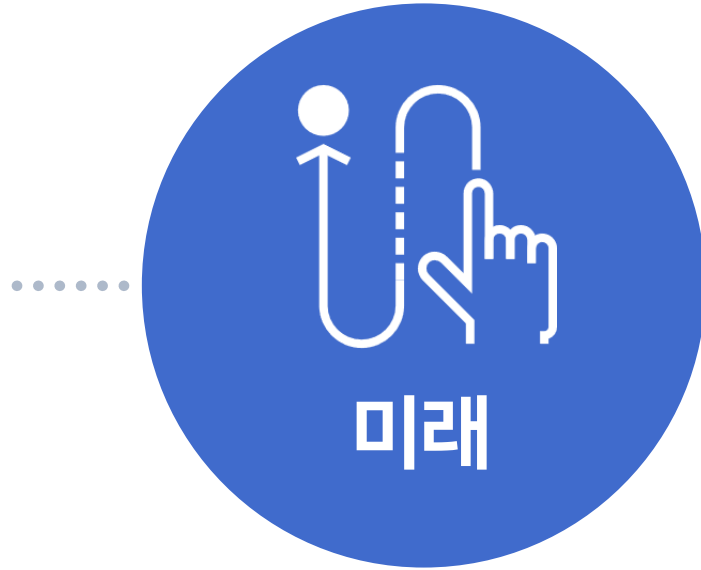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사학혁신 추진

고졸취업 활성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구축

학교 공간혁신

미래 첨단분야 인재양성 추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추진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온종일 돌봄서비스 지속 확대

고교무상교육 안정적 추진

대학 등록금 부담 지속 경감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부처 간 협업 · 협력 강화

|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인재양성

| 일자리 · 노동 · 임금격차 해소

➔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제도 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

-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한 부처간 실질적 협업 강화
- 사람투자 · 인재양성 협의회 활성화

* 차관보 신설(19.6월)을 통한 사회관계 부처 조정역할 강화

문재인정부 후반기,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실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